

해설 강의 노트

2026학년도 언어형 모의논술

총평

2025학년도 언어형 1교시 기출문제와 2025학년도 언어형 2교시 기출문제를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쉬운 논제를 출제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 기조가 2026학년도 실제 시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언어형 모의논술의 경우 2025학년도 언어형 1교시 기출문제와 2025학년도 언어형 2교시 기출문제보다는 약간 쉽지만, [문제2]에서 자료 해석이 까다롭게 나왔다는 점이 공통적이고, 최근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논술 시험 응시자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 만큼, 올해에도 작년만큼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시문 해설

쟁점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기후 위기 극복이 가능한가?'¹⁾

가능하다 - <제시문1,4> (기술 낙관주의, 지속 가능 성장 지향)

불가능하다 - <제시문2,3> (기술 비관주의, 탈성장 지향)

<제시문1>

<제시문1>은 환경과 개발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며, 양자를 조화시키는 '녹색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목표가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즉 이 둘은 조화될 수 있고,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 성장(Green Growth)'이라는 용어는 ...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를 통해서 인간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문1>의 이러한 주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낙관적 기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증대시키는 신성장 개념으로, 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잘 발전시킨다면, 인류는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필요를 충족하고 존엄을 보장²⁾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제시문1>의 주장입니다.

1) 사실 저도 처음에 [문제1]의 제시문들만 읽었을 때는 쟁점을 '지속 가능 성장 vs. 탈성장'으로만 잡을지, 아니면 그 안에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입장도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2]의 <자료 1>과 <자료2>, 그리고 [문제3]의 제시된 상황을 보고 나서,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입장도 쟁점의 일부로 포함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1]과 [문제2], [문제3]을 각각 따로따로 풀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학교 측 발표 자료를 보니까, 이 지점에서 <제시문1>이 기술 개발을 통해 인간의 삶 전반을 개선할 수 있다는 **도덕적** 낙관주의까지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건 못 잡아 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녹색산업화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빈곤을 종식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저탄소 개발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상태로 살 수 있고,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이 현재나 미래에 그것과 동일한 것을 누릴 능력도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녹색성장은 ‘만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그러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친환경 기술의 발전이며, 이것은 현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선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과거에는 에너지 전쟁이 누가 석유 자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싸움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녹색성장 시대의 에너지 전쟁에서 승패는 누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시문4〉

〈제시문4〉는 친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인류 문명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 역시 비현실적입니다.

기후변화가 생물 멸종을 가속시켜 결국 지구 생태계가 모조리 파괴되리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는 인류 문명이 존속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망은 더 어둡다.

그러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기술과 기후 위기가 초래한 기후 재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첨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시문2〉

〈제시문2〉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면서 경제 성장은 지속하려는 녹색 성장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인류가 계속해서 성장에만 매진한고 해도, 자원 고갈로 인해 결국에는 성장도 멈출 것이며 인류와 다른 지구 생명체의 생존은 위협받게 될 것이며,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도 방치될 것입니다.

〈성장의 한계〉는 인류가 그간의 성장 방식을 고수한다면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인해 100년 이내에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류와 다른 많은 종의 생존을 위협에 빠뜨리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것은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의 절제와 탈물질

화, 그리고 탈성장이라고 <제시문2>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친환경 기술을 확대하는 것 외에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제시문3>

<제시문3>은 먼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빈곤층이 아니라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반대로 부유층이 아니라 빈곤층에게 집중되는 현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이처럼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게 가혹하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 역시 부유층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시문3>은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기후 위기 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 기후위기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화석연료에 막대한 투자를 한 사람들, 가장 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들은 인간과 지구보다 탐욕과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여왔는데 왜 그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여야 하는 것인가? 어쩌면 이 때문에 기후위기 해결에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제시문3>은 기술 개발 및 친환경적 성장론으로는 이 불평등을 끝낼 수 없다면서, 성장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버리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불평등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이른바 친환경적 성장론으로는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인류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대로라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2도 상승할 것이고 이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으려면 선택해야 한다.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해 기술 개발과 성장에 대한 맹신을 즉시 버리고 환경을 보호하느냐, 아니면 소수의 부자가 파괴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경제 성장과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경제 체제를 유지하도록 내버려두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위기의 원인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지구와 인류를 우선시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문제 해설

[문제1]

각 제시문들을 어떻게 요약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첫 문장은 포괄적이고

함축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요약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1〉은 환경과 개발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며, 친환경 기술에 기반한 녹색 성장을 통해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제시문4〉는 친환경 기술의 개발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인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시문2〉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면서 경제 성장은 지속하려는 시도인 녹색 성장의 비현실성을 지적한다.

〈제시문3〉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할 부유층이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는 거의 입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문제 해결의 주체로 간주되는 현실의 모순을 지적한다.

각 문장들을 부분부분으로 뜯어 봅시다.

〈제시문1〉

쟁점과 관련된 키워드 환경, 개발, 친환경 기술, 녹색 성장

〈제시문1〉의 identity 녹색 성장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 환경과 개발이 상충하는 것만은 아님,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음

〈제시문4〉

쟁점과 관련된 키워드 친환경 기술

〈제시문4〉의 identity 인류 존속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 친환경 기술의 개발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

〈제시문1〉과 〈제시문3〉의 공통점과 차이점³⁾

공통점 둘 모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그 수단으로 기술 발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이전 단순한 paraphrasing에 불과한 차이점일 수 있습니다.

차이점 〈제시문1〉이 친환경 기술을 성장의 동력으로만 인식하는 데 반해, 〈제시문4〉는 친환경 기술을 성장의 동력뿐 아니라 기후 위기가 초래한 기후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지키는 수단으로까지 여긴다는 점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꽤 중요한 내용적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좀 paraphrasing으로 비벼 보더라도, 가능하면 차이점은 꼭 나열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적 차이나 설명 방식의 차이, 혹은 논의 범위의 차이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문2〉

쟁점과 관련된 키워드 환경 덜 오염, 경제 성장 지속, 녹색 성장,

3) 제가 〈논술의 정석 - 성균관대편〉 교재에서는 비교적 덜 강조했지만, 2026학년도 모의논술에 대한 학교 측 해설을 보니,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두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더 정교하게 짚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해서는 단순한 'paraphrasing'과 '나열'은 지양하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수준을 넘긴다는 전제하에 그나마 1번 문제 답안에서 자신의 답안을 일반적인 답안들과 차별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지 싶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서도, 나열밖에는 답이 없게 제시문을 구성하지는 않고 나름의 유의미한 차이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제시문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 고민하는 건 금물입니다.**

〈제시문2〉의 identity 녹색 성장의 비현실성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 녹색 성장의 비현실성

〈제시문3〉

쟁점과 관련된 키워드 기후 위기

〈제시문3〉의 identity 기후 위기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저여 할 부유층이 ... 현실의 모순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 X4)

〈제시문2〉와 〈제시문4〉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둘 모두 공통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진 단순한 paraphrasing을 넘어서 매우 의미 있는 공통점입니다. 두 제시문이 성장 중심에서 탈성장으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잡아 냈다면 베스트입니다.

차이점 〈제시문2〉는 인류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탈성장을 통해 진정으로 실현된다는 생태 중심의 기술 비판론을, 〈제시문3〉은 기후 위기를 유발한 계층이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기술 개발론의 모순을 지적하며 정의 중심의 기술 비판론을 펴고 있다는 점은 차이입니다. 이진 매우 중요한 내용 차이이고,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생태 중심', '정의 중심'이라는 키워드까지 이용해 가며 두 제시문 간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므로 정말 베스트한 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태 중심', '정의 중심'이라는 키워드까지 잡아 내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도 시간 안에는 하지 못했구요. 그렇지만 〈제시문2〉가 인류의 존속에 초점을, 〈제시문3〉이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정도는 언급해 줄 수 있었어야 합니다.

[문제2]

2026학년도 모의논술의 [문제2]에서도 역시 '조치(Action)와 결과'라는 렌즈로 〈자료 1~3〉을 보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치(Action)는 쟁점과 관련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다. 지금 쟁점은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느냐, 아니면 아예 탈성장을 지향해야 하느냐?' 이죠.

본격적인 문항 해설에 앞서,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논술 시험에 대비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지표들 간의 대소 비교에만 집중하면 어느 정도 답이 잘 완성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각 지표들 간의 대소 비교는 물론, 각 지표들의 함축된 의미까지도 좀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 낼 필요는 없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면 적당히 패스해도 좋지만, 일단 공부할 때는 이런 것까지 잡아 내려고 노력해

4) 이 경우, 〈제시문3〉의 요약 첫 번째 문장에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첫 문장에 쟁점과 위기, 제시문의 구체적인 identity 드러내기, 쟁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모두 해 주면 좋지만, 세 과제를 한 문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셋 중 하나 정도는 첫 문장에서 하지 않고 다른 문장들에 역할을 떠넘겨도 됩니다. 예시 답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논제의 경우 〈제시문3〉 요약에서 쟁점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제시문3〉 요약의 마지막 문장에서 "… 기후 위기와 그에 동반되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것은 친환경 성장론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버리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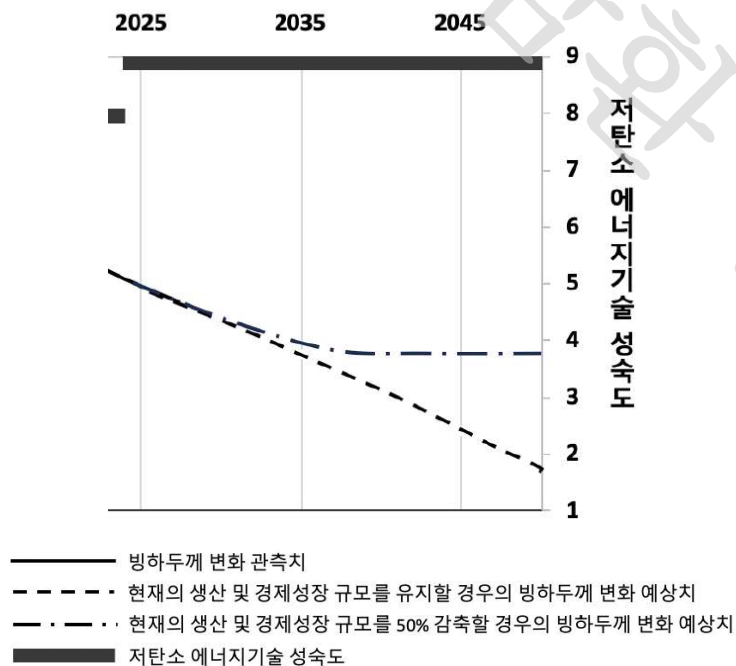
둘째, 이제 모든 자료에 대해 양가적 평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가 반드시 양가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모든 자료가 양가적 평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단 모든 자료에 대해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고려해 보시되, 한 방향만 보이면 그때 그 방향으로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한 방향만 보고 그 방향만 고려해서 쓴다면, 불완전한 답을 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하나하나 봅시다.

〈자료1〉

얼핏 조치가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라면, 결과는 빙하 두께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빙하 두께는 계속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올라가는 것이 빙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의 원인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올라감에도 빙하 두께가 얇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이제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올라감에도 빙하 두께가 계속 얇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자료1>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해답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문서의 저작권은 유삼환에게 있습니다.

후단 복제 및 무단 전재, 그리고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음에도,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빙하 두께는 계속 얇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어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빙하 두께가 계속 얇아진 것은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이며, 심지어 그것이 너무 커서 계속 그 규모가 유지될 경우에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아무리 올라가 보았자 빙하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빙하 두께가 더 이상 얇아지지 않게 하려면,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최고 수준에 다다른 후에도 그에 더해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50%로 감축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됩니다. 즉, **기술 개발만으로는 기후 위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까지 <자료1>을 해석한 다음 조치와 결과의 렌즈로 <자료1>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조치: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 상승 +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 유지 [기술 낙관주의에 부합하는 조치]</p> <p>→ 결과: 빙하 두께가 계속 얇아지는 결과[환경 파괴 문제의 지속] (부정적 결과)</p>
<p>조치: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 상승 +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50%로 감축 [기술 비관주의에 부합하는 조치]</p> <p>→ 결과: 빙하 두께가 더 이상 얇아지지 않게 되는 결과[환경 파괴 문제의 해결] (긍정적 결과)</p>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1>은 [문제1]에서 기술 비관주의의 입장에 있는 <제시문2,3>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2>는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할 때, 생태계의 회복과 인류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탈성장이라고 주장하는데, **생산과 경제 성장 규모를 줄이지 않고는 빙하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멈출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1>이 이러한 <제시문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방향만 확정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료1>이 [문제1]에서 기술 낙관주의의 입장에 있는 <제시문1,4>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있긴 있지만, 아주 메인 포인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안 적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논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앞서, <자료1>에 따르면,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최고 수준에 이른 것만으로는 빙하 두께가 얇아지는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거기에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50%까지 줄이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빙하 두께가 더 이상 얇아지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자료1>에서 확인되며, **설령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빙하 두께가 얇아지는 속도는 과거의 추세와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⁵⁾ <자료1>을 이렇게 해석하면, <자료1>은 기후 위기에

5) 이 포인트는 좀 논쟁적입니다. 안 써도 무방합니다.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서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 성장을 제시하는 <제시문1,4>의 기술 낙관주의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1>은 두 개 이상의 사실이 담겨 있어서 이 사실은 이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이고, 저 사실은 저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인 식으로 양가적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의 방향이 열려 있음으로 해서 양가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⁶⁾

<자료2>

<자료2>는 대충 보면 별 쓸 말이 없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많은 깊이 있는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모두 잡아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⁷⁾ 최대한 보이는 만큼이라도 쟁점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려는 적극성은 보여야 합니다.

쉽게 보이는 포인트는 선진경제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 성과 역시 높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잘 사는 선진경제국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성과도 잘 내고 있으니, '친환경 기술에의 투자'를 조치로, '경제 발전'과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과'를 결과로 보고 <자료2>가 [문제1]에서 기술 낙관주의의 입장에 있는 <제시문1,4>를 지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순해의 기술이전 건수'라는 지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좋은 답안은 아니며, 이 지표를 쟁점과 연관지어 해석할 때 <자료2>에 대한 해석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자료2>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선진경제국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선진경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이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조치로, 그에 따른 각종 성과를 긍정적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료2>가 친환경 기술의 개발에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실제로 환경 보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점차 많은 나라들이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있음(기술 이전 건수)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제1]에서 기술 낙관주의의 입장에 있는 <제시문1,4>를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시문1>에 따르면 녹색 성장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친환경 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는데, 선진경제국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은 이러한 <제시문1>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개발도상국은 저탄소 에너

6) 둘 간의 차이가 명확히 궁금하신 분은 <논술의 정석 - 성균관대편> 교재나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논술 합격의 필수 전략>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저조차도 시간 재고 시험 상황처럼 풀어 볼 때 모든 포인트를 잡아 내지는 못했고, 그래서 불충분한 답안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험 상황에서는 이 정도만 쓰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지 기술 성과가 낮고, 투자하더라도 투자 대비 성과도 낮은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은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에의 투자를 모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기술 낙관주의의 담론 이면에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함을 암시해 줍니다. 이때,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선진경제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활발하게 이전되고 있음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줍니다. 그렇게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조치와 결과라는 렌즈로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기술 이전이라는 조치에 따라 국가 간 양극화라는 부정적 결과가 고착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만을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강조한다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경제국에 종속되는 구조적 문제는 고착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하에서 <자료2>는 [문제1]에서 기술 비관주의의 입장에 있는 <제시문2,3>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⁸⁾ <제시문2,3>은 공통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서의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므로, <자료2>에 대한 해석을 <제시문2,3>의 이러한 주장과 연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2>에서 '선진경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이전 성과' 이 지표 역시 <자료1>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의 방향이 열려 있음으로 해서 양가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낙관주의의 입장(<제시문1,4>)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점차 많은 나라들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고 여러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기술 비관주의의 입장(<제시문2,3>)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아무리 많이 이전되더라도 개발도상국은 그 기술로부터 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자료를 양가적 평가의 근거로 삼기 위해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지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3>

<자료3>은 가장 단순합니다. <제시문3>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는 자료가 <자료3>이라고 볼 수 있죠. 저소득층이 자산은 거의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탄소 배출 비율은 매우 낮지만 기후 문제 관련 소득 손실도 가장 크고 기후 질환에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반대로 전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비율은 가장 높지만 기후 문제 관련 소득 손실은 낮으며 기후 질환에도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시문3>이 지적한 대로 기후 위기의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른 현실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자료3>은 [문제1]에서 기술 비관주의의 입장에 있는 <제시문2,3>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⁹⁾

8) <자료2>에서 이러한 반대 해석의 가능성은 학교 측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 재고 시험 상황처럼 풀어 볼 때 이 점을 짚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들 못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수준으로까지 자료를 깊이 있게 독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여러분이 명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9) 독특한 점이 있다면, <자료3>은 여느 자료들과는 달리 조치와 결과라는 렌즈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 그냥 자료의 내용 자체가 너무 대놓고 <제시문3>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어서, 대처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문제3]

[문제3]의 해설은 예시 답안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가능한 한 많이 인용해야 하고, 반드시 그것들의 현안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시 답안

2026학년도 언어형 모의논술

[문제1] 이상적 (예시 답안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예시 답안

〈제시문1~4〉는 기후 위기의 대응책에 대한 여러 견해를 담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시문1,4〉는 친환경 기술 발전을 통한 녹색 성장을 제시하는 기술 낙관주의의 입장인 데 반해, 〈제시문2,3〉은 친환경 기술 발전과 녹색 성장 담론을 비판하면서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통해 탈성장과 기후 정의 실현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는 기술 비관주의의 입장이다.

〈제시문1〉은 환경과 개발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만은 아니며, 친환경 기술에 기반한 녹색 성장을 통해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는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시문1〉의 대안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의 발전으로써 인류가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존엄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 성장의 시대에 결국 필요한 것은 친환경 기술의 발전이며, 이것이 현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제시문1〉은 진단한다. 〈제시문4〉는 친환경 기술의 개발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인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한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인류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지만,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 역시 인류 문명의 존속과 양립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일한 대안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기술 및 기후 위기로 초래된 여러 기후 재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시문1,4〉는 공통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그 수단으로 기술 발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기술 낙관주의의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1〉이 친환경 기술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시각에 그치고 있다면, 〈제시문4〉는 친환경 기술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을 넘어 기후 위기가 초래한 기후 재앙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해, 〈제시문2〉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면서 경제 성장은 지속하려는 시도인 녹색 성장의 비현실성을 지적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해 왔던 것처럼 성장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한다고 해도 곧 지구의 자원 고갈로 인해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인간과 다른 지구 생명체의 존속은 위태로워지고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는 방치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 시대에 인류의 존속을 위해 인류가 지향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성장이 아니라, 소비의 절제와 탈물질화, 그리고 탈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제시문3〉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할 부유층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는 거의 입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문제 해결의 주체로 간주되는 현실의 모순을 지적한다. 많은 양의 탄소 배출로 기후 위기 문제에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유층은 실제로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여러 기후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재력이 있기에,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대부분의 저소득층과 달리 기후 위기의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기후 위기 해결의 주체로 취급되는 이 현상이 기후 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며, 기후 위기와 그에 동반되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것은 친환경 성장론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버리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다. <제시문2,3>은 공통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모두 기술 비판주의의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2>가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탈성장에서 비롯된다는 생태 중심의 기술 비판을 펼치고 있다면, <제시문3>은 기후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계층을 기후 위기 해결의 주체로 두는 친환경 기술 개발론의 모순을 지적하는 정의 중심의 기술 비판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¹⁰⁾ (공백 포함 1928자)

[문제1] 유삼환이 시간 쫓기면서 쓴 (현실적) 답안 [편집 X, 그대로 수록]

<제시문1~4>는 기후 위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다.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서 <제시문1,4>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발전을, <제시문2,3>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담론 자체를 폐기하는 탈 성장을 제시한다.

<제시문1>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양립 가능한 목표일 수 있으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써 양자를 모두 성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환경 친화적인 녹색 기술과 친환경 사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녹색산업화가 실현되면, 현세대의 경제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면서도 환경 파괴로 인해 미래 세대의 번영 가능성이 침해될 위험은 없앨 수 있다.¹¹⁾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녹색 성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 <제시문4>는 기후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역설한다. 기후 위기는 이미 닥친 현재의 문제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 자체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은 인류 문명 존속의 관점에서 볼 때 비현실적이다. 대신 탄소 기반 에너지를 대체하는 여러 신재생 에너지 개발, 기후 위기가 초래한 여러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 기술의 개발을 통해 지구 생태계를 복원하면서도 개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 내는 편이 바람직하다. <제시문1,4>는 모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과 경제 성장을 모두 성취되어야 할 목표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¹²⁾ 그러나 <제시문1>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에 초점을 둔다면, <제시문4>는 신재생 에너지뿐 아니라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 여러 기술들까지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10) 다시 언급합니다. '생태 중심', '정의 중심'이라는 키워드까지 잡아 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시간 안에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시문2>가 인류의 존속에 초점을, <제시문3>이 정의와 불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정도는 내용적 차이로써 잡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11) 여기서, 왜 '인간의 존엄 보장' 이런 얘기는 빠졌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문1>을 읽으면서 '도덕적 낙관주의' 같은 키워드는 잡아 내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존엄 보장 이런 건 쟁점의 직접적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빠져도 큰 상관 없습니다. 아무도 못 잡습니다.

12) 여기서 '친환경 기술' 얘기를 뺐네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이르지 마세요.

이에 반해, <제시문2>는 맹목적인 경제 성장 추구는 기후 변화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강조하며, 탈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 온 대로 끊임없는 경제 성장만을 지속하려 한다면, 결국 자원 고갈로 경제 성장은 멈추고 인류의 존속도 위협받을 것이다.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방식의 녹색 성장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인류의 존속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의 확대가 아니라 탈성장화와 소비의 역제가 요구된다. <제시문3>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기후 위기에 책임이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불공정한 현실의 문제를 지적한다. 실제로 기후 위기가 초래한 기후 재앙의 피해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반면, 사리스러운 생활로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며, 오히려 기후 위기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현실은 친환경적 성장론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에 대한 맹목적 신뢰를 폐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제시문2,313>은 모두 기후 위기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친환경적 성장 추구가 아니라 탈성장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¹⁴⁾ 그러나 <제시문2>가 인류 존속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면, <제시문3>은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에 보다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차이¹⁵⁾가 있다. (공백 포함 1632자)

[문제2] 이상적 (예시 답안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예시 답안

<자료1>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더라도 현재의 생산 및 경제 규모를 유지할 경우에는 빙하의 파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빙하의 파괴를 멈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50%로 감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이 드러난다. 이는 지구의 환경 파괴를 막는 데 친환경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탈성장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을 암시한다. <자료2>는 선진경제국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그에 따른 성과도 매우 높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모두 미미함을 보여 준다. 선진경제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꾸준히 이전해 주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화석 연료 의존 정도는 높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 투자와 성과는 계속 미미한 현실은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모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술 낙관주의의 담론 이면에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함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 기술의 발전만을 강조한다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경제국에 종속되는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자료3>은 자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기후 문제 관련 손실과 기후 질화에 대한 피해 정도는 매우 큰 데 반해, 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한 고소득층은 탄소를

13) 에이징 커브인지 제가 사실 여기서 '3'이 아니라 '4'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딱 이 부분만 '3'으로 고쳐서 수록하였습니다. 실전에서 이러면 너무 치명적입니다.

14) 마찬가지로 여기서 '친환경 기술' 얘기를 뺐습니다. 치명적 실수입니다.

15) '생태 중심', '정의 중심'이라는 키워드까지 잡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취지로 내용적 차이를 짚어 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많이 배출하였음에도 이러한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 피해들에 별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불공정의 문제를 암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1,2,3>은 [문제1]에서 기술 비판주의의 입장에 있는 <제시문2,3>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2>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는 녹색 성장이 비현실적 목표임을 지적하는데, <자료1>에서 생산 및 경제 성장 수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더라도 빙하의 파괴를 막을 수 없음이 예상되는 것은 이러한 <제시문2>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근거이다. 또한, <제시문2>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방지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자료2>에 드러난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이 주장을 지지해 주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제시문3>은 친환경 성장 담론에서는 기후 위기에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역설적으로 기후 위기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모순을 지적하는데, <자료3>에서 탄소 배출 비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비해 탄소 배출 비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오히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로움은 이러한 <제시문3>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대로, <자료1>에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최고로 성숙해졌을 때 비로소 빙하의 파괴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은 환경 파괴를 막는 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자료2>에서 선진경제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정도가 높고 그에 따른 성과도 우수하다는 사실은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성취할 수 있게 해 줌을 암시한다. 또한, <자료2>에서 선진경제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이전 정도가 큼이 드러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점차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라는 친환경 기술의 활용 정도와 그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1,2>는 [문제1]에서 기술 낙관주의의 입장에 있는 <제시문1,4>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1,4>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자료1>에서 확인되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최고로 성숙해진 후에 비로소 빙하의 파괴가 중단된다는 사실과 <자료2>에서 확인되는 선진경제국일수록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경제 성장 및 환경 보호 성과가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제시문1,4>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이다. (공백 포함 2020자)

[문제2] 유삼환이 시간 쫓기면서 쓴 (현실적) 답안 [편집 X, 그대로 수록]

<자료1>에서는 2025년 이후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최고로 성숙해졌을 때,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50%를¹⁶⁾ 감축할 경우 빙하 두께가 더 이상 얇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이 확인된다. 설령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빙하 두께 변화의 추세는 과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16) '50%를'이 아니라 '50%로'라고 썼어야죠. 에이징 커브인가 봅니다.

적어도 기후 변화 진향의 가속화는 막을 수 있으며, 최상의 경우에는 그 진행을 멈출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임을 암시한다. <자료2>에서는 선진경제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모든 저탄소 에너지 기술 투자·성과 지표에서 앞서고 있음이 드러난다. 선진경제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더 높은 비율의 정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탄소 에너지 기술 발전과 탄소 배출 감축 정도에서 개발도상국을 앞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선진경제국의 GDP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의 투자가 탄소 감축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함은 물론, 물질적 경제 성장에도 이로움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1,2>는 [문제1]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친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을 제시하는 <제시문1,4>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1>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하는 녹색 성장 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통해 확보된다고 보는데, <자료2>에서 선진경제국이 개발도상국을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투자·성과 지표에서 앞서는 것은 이러한 <제시문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제시문4>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써 기후 위기가 초래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이 계속 빙하 두께의 변화 정도 완화에 기여함을 보여 주는 <자료2>는 <제시문4>의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이다.

한편, <자료1>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계속 성장함에도 빙하의 두께는 계속 얇아짐이 확인된다. 심지어 그 성숙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더라도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유지할 경우 빙하의 파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진행을 막으려면,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야만 한다. 17) <자료3>은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 경제 성장에 이로울지 모르나, 그렇더라도 그 혜택은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돌아가며, 저소득층은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불공정을 드러낸다. 저소득층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기에, 이는 심각한 불공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1,3>은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님을 암시하므로, [문제1]에서 기후 위기의 대응책으로서 친환경 녹색 성장이 아니라 탈성장을 제안하는 <제시문2,3>을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2>는 친환경 기술로 환경을 덜 오염시키려는 생각이 비현실적임을 지적하는데, <자료1>에서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빙하 두께 감소 추세가 그대로 지속됨은 <제시문2>의 주장의 실증적 근거이다. 또, <제시문3>은 기술 개발과 친환경 성장 담론에서는 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자들이 혜택만 누리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해결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자료3>에 나타난 탄소 배출 비율과 각종 피해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제시문3>의 주장을 입증해 준다. (공백 포함 1691자)

[문제3]

- 17) 여기에 앞 문장의 표면적 사실에 대한 암시적 사실에 대한 문장, 예를 들어 “이는 지구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탈성장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을 암시한다.” 따위의 문장이 왜 없을까요? 에이징 커브가 세계 왔나 봅니다.

찬성

제시된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의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중 어느 하나의 목표에만 치중할 이유는 없다. <제시문1,4>가 강조하듯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은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며, 친환경적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성취 가능하다. 그러므로, 각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부과한 분담금을 탄소 중립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면,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풍요를 누리면서도 지구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최고의 성숙도에 이르더라도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줄이지 않고서는 빙하의 파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1)와 저탄소 에너지 기술 투자와 그 성과가 선진경제국에만 국한된다는(자료2)를 근거로, 친환경 기술 발전만으로는 기후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제시문3>의 주장과 그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되는 <자료3>이 암시하듯,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도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추구가 아니라 탈성장으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¹⁸⁾ 그러나, <자료1>에서도 생산 및 경제 성장의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빙하 파괴의 진행을 막을 수 없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가 최고 수준에 이르러야 함을 알 수 있다. 만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 없이 탈성장만을 추구한다면 탄소 배출 없이는 인류의 문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제시문4>가 지적하듯이, 인류의 문명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 <자료2>나 <자료3>을 근거로 하는 기후 불평등의 문제 제기 역시, 제시된 정책이 각 국가가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완화 가능할 것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정한 방식의 분담금 책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백 포함 1212자)

반대

제시된 정책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친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 <제시문2>가 지적하듯이 환경을 덜 파괴하는 방식의 녹색 성장의 꿈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제시된 정책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처한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은 더욱 파괴되고 결국엔 경제 성장마저 멈추게 될 것이다. 이는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빙하의 파괴를 막을 수 없음을 암시하는 <자료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제시문3>이 지적하고 <자료3>에서 암시되듯이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 시도는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시된 정책은 국가 간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

18) 왜 예상 반론이 두 개이죠? 그래서 재반박도 두 개를 할 거긴 합니다. 그런데 예상 반론은 하나만 쓰라고 했으면서 왜 두 개나 써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인용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예상 반론이 몇 개인지보다는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인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술을 개발해 보았자, 그 혜택은 일부의 부유층과 부유한 국가들만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료2>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경제국으로부터 아무리 많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이전받아도 개발도상국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높이지 못하는 데서도 입증된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기술의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모두 성취할 수 있다는 <제시문1,4>의 주장과 <자료2>에 드러난 선진경제국의 친환경 기술 개발의 성과를 근거로 제시된 정책을 통해 탄소 중립 기술을 개발하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제시된 정책이 국가별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의 문제도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 기술 개발로 실제로 당장의 막대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개발도상국에게까지 돌아가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설령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걷는다고 해도, 일부 부유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분담금에 비해 막대하게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반해, 가난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분담금에 비해 막대하게 적은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는 지속될 수 있다. <제시문3>이 지적하듯이, 결국 친환경 기술 개발 담론을 주도하는 주체는 부유한 국가, 부유한 개인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백 포함 1117자)

[문제3]의 경우, 유삼환이 시간 쫓기면서 쓴 (현실적) 답안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약을 고려하면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쓰더라도 상위권인 편이겠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교재에 첨부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